

# 인하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인하 사회과학논총

##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 <목 차>

인천 가치 재창조 연구 .....	김천권	5
시민사회와 행정 .....	정일섭	19
A Discours on Problematique of Decentralization and Critical Civil Societies in South Korea .....	서규환	47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	정영태	63
중국대학의 관료주의 문화 .....	정하영	91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비교를 중심으로 .....	장부년	119
해방의 잠재력으로서의 "기억의 정치학" :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	박상희	143
한국 선거에서 불평등 민주주의 : 제18대 대선 소득별 투표 행태 분석 .....	서희원	159
영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윤주엽	185
부록 논문작성 및 집필요강 .....		205



# 한국 선거에서 불평등 민주주의\*

- 제18대 대선 소득별 투표 행태 분석 -

서회원\*\*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시간이 흘러도,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불평등 지수는 증가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페이지는 오늘날의 우리의 민주주의가 혹시, “불평등 민주주의”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 속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과 놀라운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증가하는 불평등 속에서도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하여 불평등을 개선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계층 투표는 망각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계층보다는 지역, 세대, 이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계층 투표의 현상이 일면 드러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고무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계급배반 투표 행태”(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당을 찍는 현상)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페이지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득별 투표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선거 과정에서의 불평등 민주주의의 실상의 단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선거에서 소득별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있다면, 유권자들이 소득별로 어떤 정치사회적 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소득별로 유권자가 과거 정권의 경제 평가와 본인이 뽑은 후보자의 정권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소득별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박근혜 후보 선택에 있어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특징적인 발견점이었다. 둘째, 유권자들은 소득별로 이념성향, 정당선호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은 보수 성향과 새누리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은 이념적 근접성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와 더 큰 근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볼만한 발견점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별로 지난 정권에서의 국가 및 가정에 대한 경제사정 평가, 다음 정권에서의 국가 경제사정 기대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다음 정권의 국가 경제 사정에 대한 기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주제어 : 불평등 민주주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계층 투표, 소득별 투표행태, 계급배반 투표

\* 본 페이지는 2016년 7월 1~2일에 걸쳐 개최된 제4회 불평등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박사과정 (hwiwonseo88@gmail.com)

## I.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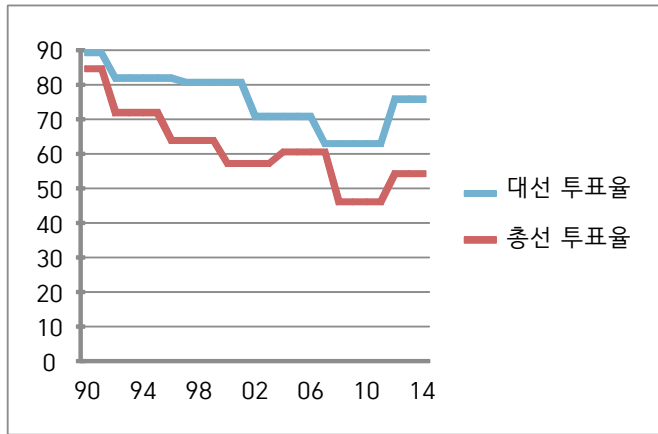
87년 민주화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 안착 된 이후,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얼마나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잘 작동하였는가.<sup>1)</sup>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30년간 동안 한국 사회 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해오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97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민주당 집권 시기 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구했으며, 노동운동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지만 시장 규율에 의한 재벌 횡포 제어에 실패하고, 양극화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었다. 한편, 2002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보수당 집권 시기 동안 재벌대기업을 위한 ‘줄푸세’를 진행하고, 법인세를 인화하고, 부자감세를 인화하는 등 재벌 친화적 경제구조가 추구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축소되었으며, 복지는 인색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sup>2)</sup>

민주주의의 시간이 흘러도,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오르는 양극화와 불평등 지수는 87년 일궈낸 절차적 민주주의가 혹시, “불평등 민주주의”는 아닐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sup>3)</sup>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게 되면, 97년 IMF 경제 위기 직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해지는 0.3에 바로 아래까지 치닫더니, 2004년에 접어서는 계속해서 0.3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해지는 불평등은 놀랍게도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과 비슷해 보인다. 이는 사회경제적 영영의 문제로 생각되는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가 사실, 선거, 정당, 의회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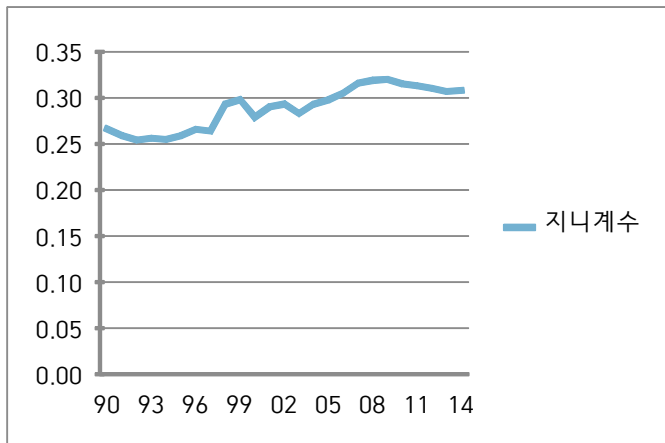
1) 이 문제의식에 대하여 최장집(2002)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참고하였다.

2) 오재록, 더미래연구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토론회(2015년 10월 29일)에서 민주정부와 보수정부를 평가하였다.

3) 불평등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선거, 정당 체계, 그리고 의회 등의 각종 기제들에서 평등한 대표 선출 및 민주적 반영의 왜곡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선거 과정 혹은 정당체계에서 불평등 민주주의는 소외계층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소외계층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대표를 선출하거나, 그렇게 동원되는 식으로 나타난다. 의회에서 불평등 민주주의는 부유한 계층의 로비를 통한 왜곡된 입법화 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화의 저지 등으로 일어난다.



<그림 1> 대선 투표율, 총선 투표율



<그림 2> 지니계수

<표 1> 지니계수와 투표율 사이의 상관관계

	지니계수	대선투표율	총선투표율
지니계수	1		
대선투표율	-.816**	1	
총선투표율	-.828**	0.832**	1

도대체 왜 이렇게 증가하는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 분단의 과정으로 인하여 계급의 토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착화된 지역주의로 인하여 계급 균열에 기반을 둔 투표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한편에서는, 2002년 이후의 연구들은 한국의 선거 과정에도 희미하게나마 지역균열과 함께 세대균열, 그리고 계층균열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나타난 계층균열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왜곡된 투표 행태를 보여준다는 발견과 함께 나타나 우려를 낳아왔다. 그 왜곡된 투표 형태란 바로, 저소득층이 오히려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계급 배반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계층별 계급별 투표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선거과정에서의 불평등 민주주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이제 내년이면 30년에 접어들게 될 한국의 선거는 과연 그 작동에 있어서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는 선거 과정에서 계층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의 계층 투표는 망각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계층 보다는 지역, 세대, 이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계층별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출신 지역이나 출생연도, 혹은 이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계층에 따라 후보 혹은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몇몇의 정치학자들이 선거 과정에서의 계층 투표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하는 유권자가 그들의 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평등 시대,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sup>5)</sup>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계층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층 투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유한 계층은 그들의 계층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 계층은 그들의 계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 및 후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와 상반되는 후보 혹은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증가하는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가 계층별로 왜곡된 형태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증가하는 불평등 시대, 한국 선거에서의 불평등 민주주의를 계층 투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4) 이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함께 다시, 아주 짧게, 연구되기도 하였다.

5) 김윤태, “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 정당'을 찍을까?,” 프레시안, 2015.12.26.



는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sup>6)</sup>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소득별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한국 선거에서 소득별로 후보자 선택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2) 나타난다면, 소득별로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적 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3) 추가적으로 소득별로 유권자가 과거 정권의 경제 평가와 본인이 뽑은 후보자의 정권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쓰이는 데이터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데이터이다.

본 페이지는 다음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불평등 민주주의 및 한국 선거에서 계층 투표와 관련된 국내외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분석 모델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거에서의 소득별 투표 행태를 분석한다.

## II. 불평등 민주주의와 국내에서의 계층 투표 연구

### 1. 불평등 민주주의 관련 논의

증가하는 불평등 시대, 많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저소득층의 투표 행태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최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 소득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줄 진보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왜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지, 혹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줄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계층을 옹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지 등을 연구하여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증가하는 불평등 시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혹은 중간층 유권자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중심에, 미국 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중심 인사들이 구성한 “불평등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sup>7)</sup>가 중심점으로 작동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증가하는 불평등 시대에서 미국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 in an Age of

6)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3장 분석방법에서 기술. 이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해 계급, 계층별 정치적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

Rising Inequality)』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증가, 소득계층별 정치적 참여율의 차이, 그리고 조직화의 차이가 정치권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계층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7)</sup>

즉, 이 보고서에서 미국정치학회의 학자들은 첫째, “정치적 목소리”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중산층 등이 투표의 형식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또한 투표를 넘어선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당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동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민주적 반응성”과 관련하여,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집권 이후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선거와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통해 이들의 이해관계에 민주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불평등 민주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힘입어 미국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은 좀 더 불평등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두고, 승자독식의 정치학, 그리고 정당과 선거 제도 등 자유민주주의 대표 체제의 허상을 문제로 지적해오고 있다. 제이콥 해커(Jacob Hacker)와 폴 피어슨(Paul Pierson)은 2010년, 『승자 독식의 정치학(Winner-take-all-politics)』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승자 독식의 정치 시스템이 미국 정치권력과 월가 금융자본이 결탁해 최상위 부유층이 부를 독차지하도록 해왔는지, 더불어 규제 완화, 감세, 기업의 지배구조 이완, 노동조합 방해 등을 통해 투기 자본이 득세하도록 만들었는지 등을 보여주었다. 특히, 현대의 정치 조직들이 새로운 경제적 조건들을 반영한 정책들을 표류시키거나, 방지시키는 방식으로 승자 독식의 정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8)</sup>

더 나아가, 래리 바텔스(Larry Bartels)는 2012년, 불평등 민주주의(Unequal Democracy)라는 책에서 “그렇다면 왜 저소득층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왔는가?” 라고 물음을 제기하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불평등 문제로서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못하도록 막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유권자들은 최근의 경제성장에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투표를 한다는 점, 둘째, 이상하게도 유권자들은

7) Task Force on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 2004. “American Democracy in an Age of Rising Inequa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8) Jacob S. Hacker Paul Pierson. 2010. Winner Takes all Politics. Simon & Schuster.

자신이 어떤 소득 구간에 속하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 셋째, 유권자들은 선거 유세에 비용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크게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다.<sup>9)</sup>

요컨대, 미국 정치학자들의 증가하는 불평등 시대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시민들이 그들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측면에서 민주적 기제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정책선거를 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같은 하나의 사회경제적 이슈의 측면에서 정당의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엄밀하게는 정책선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국내에서의 계층 투표 관련 연구

이용마(2014)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계층균열 구조의 등장」에서 1997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 계층균열에 대한 경험적 분석 시도 하였다. 유권자들을 직업, 소득, 학력 등을 종합해 상층, 신/구 중산층, 하층 등 네 계층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상층은 보수, 신중산층은 진보 성향 후보에게 투표하는 계층균열이 뚜렷함을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 계층투표는 각 계층의 이념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도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념균열이 강한 선거에서는 계층균열이 지역균열을 상쇄하고, 이념균열이 약화된 선거에서는 지역균열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계층균열도 약해졌다는 것이다.

강원택(2013)은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에서 그간의 한국 선거 정치에서 나타난 역설적 현상 중 하나는 계층/계급이 투표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하위 계급 집권 유권자가 오히려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저소득층 유권자가 스스로를 보수적으로 규정하거나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현상을 보이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 ‘계급 배반 투표’의 원인과 사회 계층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그 한 가지 원인을 저소득층에서의 세대와 계층의 혼합에서 찾았다. 저소득층 유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자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강한 보수성이 저소득층 유권자의 ‘계급 배반적’ 특성을 드러나게 했다고 말하였다.

한귀영(2013)은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에서 한국에서 빈곤보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역사적, 현재적 실태를 파악

9) Larry M. Bartels. 2010.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하고자 했다. 특히 세대갈등의 심화 속에서 계층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구분해 각 집단 내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정치적 선택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대 이상에서는 빈곤보수 현상이 나타났으나 40대 이하에서는 이와 달리 빈곤진보 경향도 일정 부분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병유·신진욱(2014)는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 한국에서 계층별 정당 지지와 정책 태도, 2003~2012」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불운이자 불편한 진실이었다며, 저소득층의 정당 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저소득층이 뚜렷한 ‘계급 배반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청장년층의 경우 ‘계급정치’의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이념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한국의 정당 지지나 투표 행태에서 이념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사회경제적 이슈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셋째, 불평등인식이나 정부 역할, 재정지출 선호 등에 관한 평등주의적 정책태도와 관련해서는, 중간소득층에서 이러한 정책태도가 정당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수혜대상이 빈곤층임이 분명할 경우에만 정당지지에 유의한 효과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표 2> 한국에서의 계층 투표에 관한 연구의 흐름**

분류	연구 제목
87년 민주화 이후 계층 정치 연구	정영태. 1992. 계급정치의 등장과 한계-노동조합과 정당을 중심으로.
	안희수. 정영태. 1992. 한국에서 중간계급의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마인섭. 2003. 한국 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 이후, 계층정치 연구(주로 이념 연구)	강원택.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신광영. 2004. 한국 진보정치의 존재조건.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안순철. 가상준. 2006.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노동당 투표자에 대한 분석.
	김영태. 2006. 중산층의 투표행태: 1992-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장상철. 2008. 누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정당지지 결정요인.
	황아란. 2009.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분류	연구 제목
2012년 대선 및 총선 이후 계층투표에 대한 재 연구	강원택. 2013. 사회계층과 투표 선택.
	장승진. 2013.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 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이용마. 2013. 한국 사회 계층균열의 등장과 정당재편성: 2000년대 선거를 중심으로.
	이용마. 2014.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계층균열 구조의 등장.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 2013.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귀영. 2013.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전병유. 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 한국에서 계층별 정당 지지와 정책 태도. 2003~2012.

본 논문은 2012년 대선 및 총선 이후 전개된 계층투표에 관한 연구들에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 Ⅲ.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 1. 분석 대상

제18대 대선이 시행되었던 2012년 계층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었을까? 계층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소득별로 계층을 분류하여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OECD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라 2012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보면, 먼저, 2012 중위소득은 1,840,710(원)으로, 이것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득구간은 920,355~2,761,065(원)이다. 자연스레,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빈곤층의 소득구간은 920,355(원)이고, 중위소득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2,761,065다.

한국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이 두 집단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1,495,55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1,495,550(원)~1,794,60(원) 미만이다.

<표 3> 2012년 대선 당시 소득계층 구간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OECD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위소득의 50~150%	중위소득의 150% 이상
한국 2012년 소득계층 구간	920,355(원) 미만 * 최저생계비: 1,495,550(원)	920,355(원)~2,761,065(원) * 균등화중위소득: 1,840,710(원)	2,761,065(원)
비율	상대적 빈곤층(17.6%)		

출처: 통계청

<표 4>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100.0	14.2(%)	30.0(%)	25.2(%)	14.4(%)	9.7(%)	6.5(%)

출처: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2. 분석대상 샘플의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빈도분석을 통해 1200명의 표본이 어떤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가지는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교차분석을 통해 계층별 후보자 선택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에 따라 한달가구소득을 보면, 200~400만원이 588명(49.0%)로 거의 절반이 중하위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200만원 미만이 246명(20.5%)으로, 한국 사회의 20% 정도가 저소득층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400~600만원이 189(15.8%)로, 600만원 이상이 138(11.5%)로 나타났다.

<표 5> 2012년 제18대 대선 계층별 현황

단위 : 명(%)

계층(한달가구소득)	
전체	200만원미만 246(20.5)
	200~400만원 588(49.0)
	400~600만원 189(15.8)
	600만원 이상 138(11.5)
	무응답 39(3.3)
합계	1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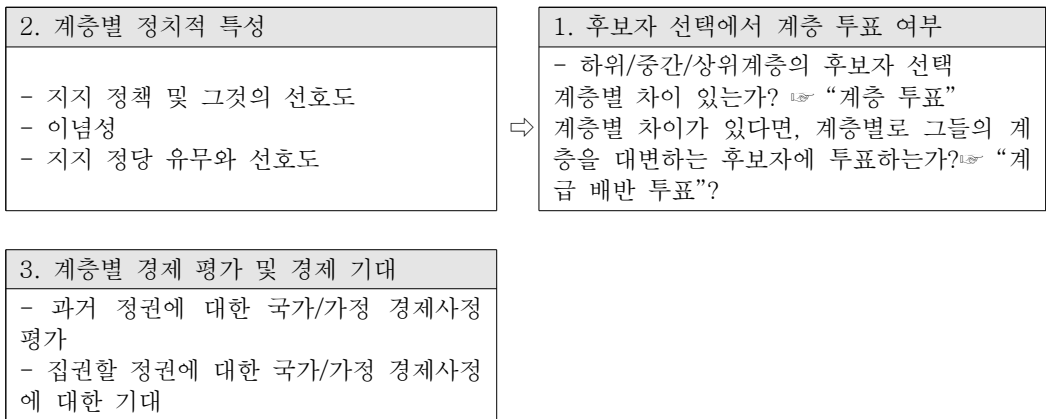
### 3. 분석 방법

본 논문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계층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계층별로 어떤 투표 형태를 띠는지, 그리고 계층별 차이가 나타난다면, 계층별로 정치적 특성(정책태도, 이념, 지지정당)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계층별로 경제 평가 및 경제에 대한 기대감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첫째, 2012년 계층 투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계층별 후보 선택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계층별 차이가 있는지(“계층 투표”), 나타난다면, 저소득층일수록 진보적인 후보 및 정당에 투표하고 고소득층일수록 보수적인 후보 및 정당에 투표하는 “계급 신뢰 투표”가 일어나는지, 혹은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후보 및 정당에 투표하거나 고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후보 및 정당에 투표하는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2012년 계층 투표에 대한 정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다. 각 계층별로 경제민주화 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0-1), 이념성(0-10), 지지정당에 대한 선호도(0-10)에서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2012년 계층 투표에 대한 경제 평가 및 경제 기대감에서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한다. 소득 구간별로 과거 정권 시기 가정 경제사정(1-4)과 국가 경제사정 평가 및 집권할 정권의 가계 경제 사정 및 국가 경제 사정 평가(1-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



<그림 3> 분석모형

## IV. 제18대 대선 중심 분석

### 1. 계층별 투표행태

기존의 연구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도 계층계급 투표가 관찰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에 한국 선거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작동했던 변수는 지역균열이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계층투표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용마, 2013). 그렇다면 한국 선거 과정에서 계층투표가 등장한지 10년에 접어들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계층별, 투표행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분석 결과, 소득수준별 후보자 선택 교차분석 결과, 박근혜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2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기대빈도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다른 소득구간에 속하는 중산층은 기대빈도보다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였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다른 소득집단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근소하게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강한 박근혜 후보 지지로 인하여 집권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제18대 대선 소득별 후보선택

단위: 빈도는 명, 전체는 %

구분	박근혜	문재인	기타	무응답 및 기권	전체	
200만원 미만	빈도	134	84	2	26	246
	기대빈도	112.8	106.0	1.0	26.2	246.0
	전체	11.2%	7.0%	0.2%	2.2%	20.5%
200~400만원	빈도	254	272	1	61	588
	기대빈도	269.5	253.3	2.5	62.7	588.0
	전체	21.2%	22.7%	0.1%	5.1%	49.0%
400~600만원	빈도	84	86	0	19	189
	기대빈도	86.6	81.4	0.8	20.2	189.0
	전체	7.0%	7.2%	0.0%	1.6%	15.8%
600만원 이상	빈도	59	59	2	18	138
	기대빈도	63.3	59.5	0.6	18	138.0
	전체	4.9%	4.9%	0.2%	1.5%	11.5%



단위: 빈도는 명, 전체는 %

구분		박근혜	문재인	기타	무응답 및 기권	전체
무응답	빈도	19	16	0	4	39
	기대빈도	17.9	16.8	0.2	4.2	39.0
	전체	1.6%	1.3%	0.0%	0.3%	3.3%
전체	빈도	550	517	5	128	1200
	기대빈도	550.0	517.0	5.0	128.0	1200.0
	전체	45.8%	43.1%	0.4%	10.7%	100.0%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18.688 p<0.1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점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계층균열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왔다. 한국 사회 내 계층균열 존재여부를 두고 논박이 있었고, 계층균열이 형성되었다는 주장 내에서도 저소득층의 “배반적 투표 행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계층균열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 내 계층균열은 저소득층이 진보적 후보자에 투표하는 양상이 아닌, 왜곡된 형태 양상으로 존재한다.

## 2. 소득별 정치사회학적 특성 분석

지금까지 소득별 후보자 선택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앞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별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의 분석은 왜 소득별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소득별 정치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별 정치적 특성은 소득별 경제민주화 및 복지확대 사안에 대한 관심도, 이념 성향, 지지 정당 등을 본다.

### 2.1. 소득별 경제민주화 및 복지확대 사안 관심도

분석 결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확대 대한 관심도는 모두 3점대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별 경제민주화 및 복지확대 사안에 대한 관심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중간소득층(200~600만원)이 3.16으로 평균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고소득층(600만원 이상)이 3.23으로 이를 뒤따랐고,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이 3.38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한편, 복지확대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소득층(200~600만원)이 2.98로 평균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고, 고소득층(600만원 이상)과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이 3.13으로 비슷한 수준의 복지확대에 대한 관심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7> 소득별 경제민주화 및 복지확대 관심도**

단위: N은 명, 평균은 매우많다1~전혀없다10 점

	경제민주화 관심도		복지확대 관심도	
	N	평균	N	평균
200만원 미만	240	3.38	241	3.13
200~400만원	575	3.16	577	2.98
400~600만원	185	3.16	186	2.98
600만원 이상	137	3.23	137	3.13
무응답자	39	2.95	38	3.26
합계	1176	3.21	1179	3.04
ANOVA	F=0.663, p=0.618		F=0.430 p=0.787	

## 2.2. 소득별 이념 성향

다음으로, 소득별 이념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별로 매우진보 0부터 매우보수 10까지의 점수를 분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권자들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이념성향 인식의 평균은 7.66으로 나타났고,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념성향 인식은 4.35로 나타났고, 이정희 후보에 대한 이념 성향 인식은 1.9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자기 이념성향 인식은 5.65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박근혜를 매우 보수에 가깝게 평가하고, 문재인 후보를 매우 미미하게 진보로 평가하였으며, 이정희 후보를 매우 진보에 가깝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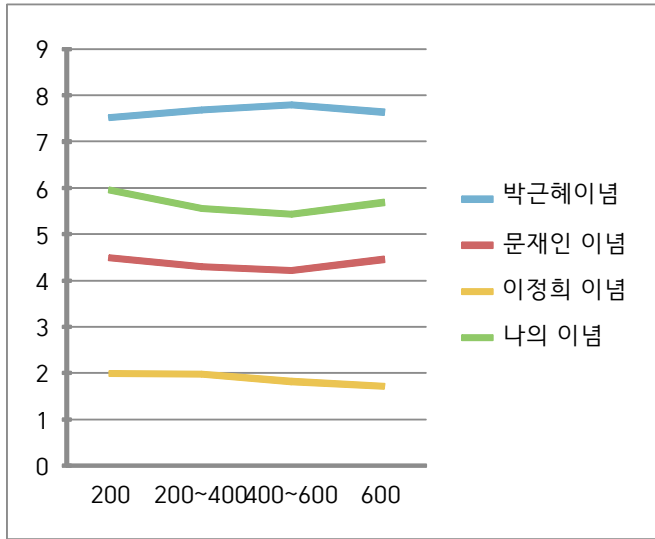
**<표 8> 제18대 대선 소득별 이념 성향**

단위: N은 명, 평균은 매우진보 0 ~ 매우보수 10

	박근혜 이념		문재인 이념		이정희 이념		나의 이념 성향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200만원 미만	234	7.52	229	4.49	225	1.99	233	5.95
200~400만원	573	7.68	368	4.30	558	1.98	577	5.56
400~600만원	182	7.79	182	4.22	179	1.82	185	5.43
600만원 이상	135	7.64	135	4.45	134	1.72	136	5.68
무응답자	37	7.76	36	4.33	37	1.46	36	6.11
합계	1161	7.66	1650	4.35	1133	1.91	1167	5.65

단위: N은 명, 평균은 매우진보 0 ~ 매우보수 10

	박근혜 이념		문재인 이념		이정희 이념		나의 이념 성향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ANOVA	F=0.450, p=0.773		F=0.606, p=0.659		F=0.714, p=0.583		F=2.058, p=0.084(<0.1)	



<그림 4> 제18대 대선 소득별 이념 성향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한 점은, 유권자들이 자기의 이념 성향을 표명할 때, 보수 지형에 속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의 자기 이념 성향 평가는 5.6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발견은, 저소득층의 자기 이념성향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간소득층(400~500만원), 중간소득층(200~400만원)이 5.43, 5.56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층(600만원이상)이 저소득층(200만원미만)이 5.68, 5.95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 이념 성향의 근접성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롭게 살펴볼 만하다.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의 이념인식은 박근혜 후보와의 이념인식과 1.57, 문재인 후보의 이념인식과 1.46의 멀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더 가까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반면, 중간소득층(200~400만원)과 중간소득층(400~600만원)은 본인의 이념과 후보자의 이념과의 근접성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10) 이러한 점에서 다운스의 합리적 투표 선택 모델에 입각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미국식 중산층 민주주의가 허구이거나, 있다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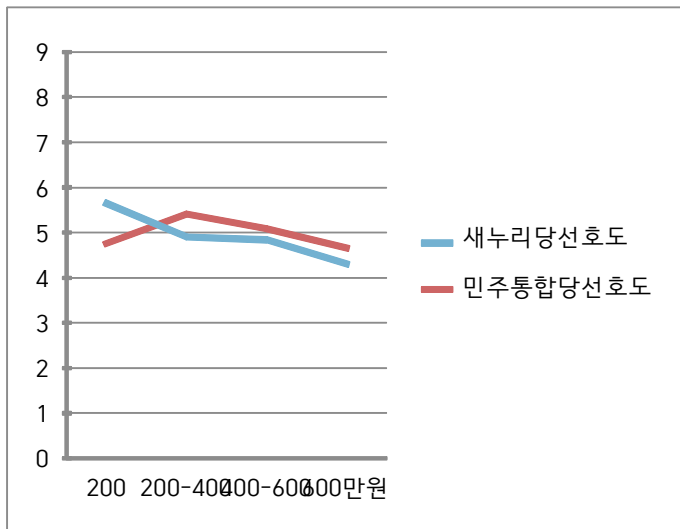
### 2.3. 소득별 정당선호도 특성

마지막으로, 소득별 정당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별로 새누리당 선호도, 민주통합당 선호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선호도에서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이 5.64로 높게 나타났고, 민주통합당 선호도에서는 중간소득층(200~400만원)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제18대 대선 소득별 정당선호도

단위: N은 명, 평균은 매우싫음0~ 매우좋음10

	새누리당 선호도		민주통합당 선호도		통합진보당 선호도	
	N	평균	N	평균	N	평균
200만원 미만	236	5.64	229	4.76	229	1.98
200-400만원	576	4.90	569	5.41	567	2.37
400-600만원	184	4.84	184	5.09	179	2.18
600만원 이상	134	4.31	132	4.66	130	1.99
무응답	36	5.17	35	4.77	36	2.53
합계	1166	4.98	1149	5.12	1141	2.22
ANOVA	F=4.285, p=0.002**		F=4.642, p=0.001**		F=1.711, p=0.145	



<그림 5> 제18대 대선 소득별 정당선호도

지금까지 소득별 정치사회적 특성 차이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요컨대,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의 경우, 이념적으로 가장 보수적이었고, 정당 선호도에 있어서 새누  
 있다.

리당을 지지하였다. 이념 차이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더 가깝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으로 박근혜 후보를 택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간소득층(200~400만원)의 경우, 이념적으로 조금 보수적이었고, 정당선호도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이로 인해 이념 차이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로 박근혜 후보를 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간소득층(400~600만원)의 경우, 이념 성향에서 가장 덜 보수적이었고, 근소하게 민주통합당을 더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6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념성향에 있어서 보수적인 반면, 정당선호도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양가적인 특징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지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소득별 후보자 선택이 바로, 각 소득별 정치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소득 집단은 경제민주화·복지확대 등 사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념 성향이나 정당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념의 근접성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 3. 소득별 경제평가 및 전망에 대한 평가

소득별로 나타나는 정당선호도에서의 차이는 혹시 각 집권 정당의 경제평가 및 기대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서 여기에서부터는 소득별 보수 정당의 집권 시기 동안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3.1. 소득별 이명박 정권 평가

소득별로 이명박 정권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우 잘했다 1부터 매우 못했다 4까지를 평가하게 한 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2.98로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2.90으로 평균보다는 더 좋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10> 소득별 이명박 정권 평가**

단위: N은 명, 평균은 매우잘했다1~매우못했다4점

	이명박 정권 평가도	
	N	평균
200만원 미만	246	2.90
200~400만원	588	2.99
400~600만원	189	3.03
600만원 이상	138	3.02
무응답자	39	2.97
합계	1200	2.98
ANOVA	F=0.852, p=0.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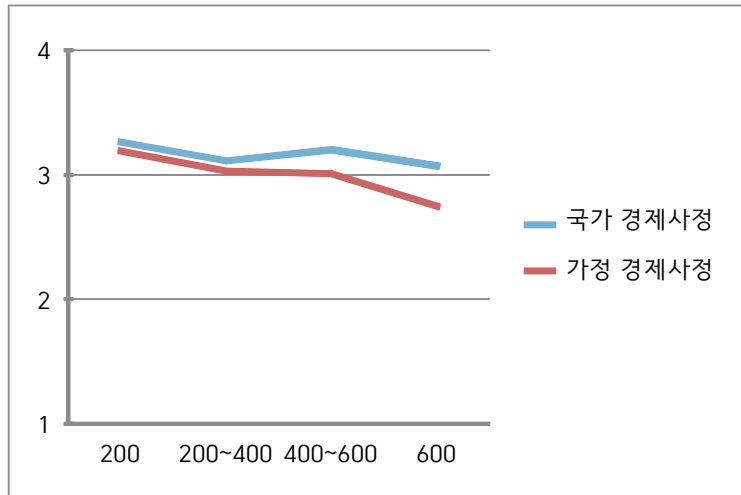
### 3.2. 소득별 이명박 정권 시기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평가

소득별로 이명박 정권 시기 정권 평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명박 정권 시기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평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국가 경제사정에 대해 저소득층(200만원 미만), 중간소득층(400~600만원)이 3.26, 3.20으로 나쁘다고 평가하였고, 중간소득층(200~400만원), 고소득층(600만원 이상)은 3.11, 3.07로 상대적으로 덜 나쁘게 평가하였다. 가정 경제사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나쁘게 평가하였고, 중간소득층(200~400만원), 중간소득층(400~600만원), 고소득층(2.75) 순으로 3.03, 3.01, 2.75로 상대적으로 덜 나쁘게 평가하였다.

**<표 11> 소득별 이명박 정권 시기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평가**

단위: N은 명, 평균은 매우좋았다1~전혀나빴다4점

	국가 경제사정		가정 경제사정	
	N	평균	N	평균
200만원 미만	246	3.26	246	3.19
200~400만원	588	3.11	588	3.03
400~600만원	189	3.20	189	3.01
600만원 이상	138	3.07	138	2.75
무응답자	39	3.08	39	3.08
합계	1200	3.15	1200	3.03
ANOVA	F=2.312, p=0.056(<0.1)*		F=7.255 p=0.000***	



<그림 6> 소득별 이명박 정권 시기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평가

### 3.3. 소득별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 및 경제사정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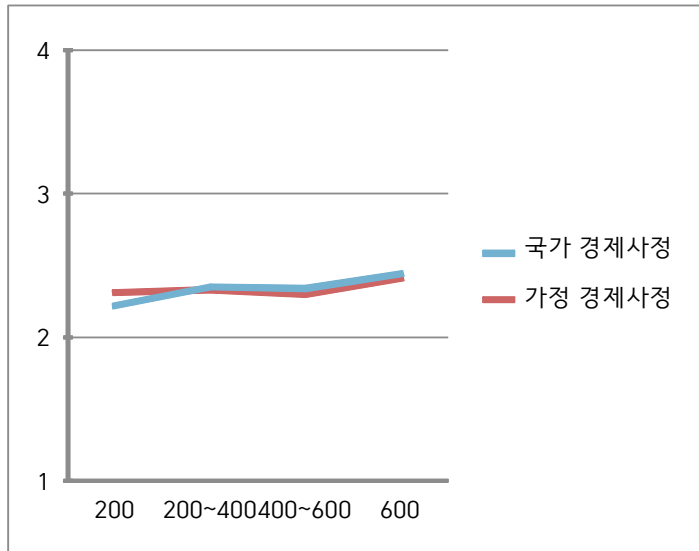
한편, 소득별 다음 정권 시기 국가 및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소득별로 국가의 경제사정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자기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정권 시기 국가의 경제사정에 대해 저소득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은 2.22로 평가하였고, 중간소득층(200~400), 중간소득층(400~600만원)이 2.35, 2.34로 비슷하게 평가했고, 600만원 이상이 2.44로 가장 비관적으로 보았다.

<표 12> 소득별 다음 정권 시기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기대

단위: N은 명, 평균은 매우 좋을 것이다1~전혀나쁠 것이다4점

	국가 경제사정		가정 경제사정	
	N	평균	N	평균
200만원 미만	246	2.22	246	2.31
200~400만원	588	2.35	588	2.33
400~600만원	189	2.34	189	2.30
600만원 이상	138	2.44	138	2.41
무응답자	39	2.51	39	2.38
합계	1200	2.34	1200	2.33
ANOVA	F=2.512, p=0.040(<0.05)**		F=0.498, p=0.737	



<그림 7> 소득별 다음 정권 시기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기대

지금까지 소득별로 지난 정권과 다음 정권에 대한 경제사정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요약하면,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의 경우, 이명박 정권 시기 국가 경제 및 가정 경제사정을 가장 안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다음 정권 시기 국가 경제를 가장 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저소득층은 지난 집권 정당의 국가 경제 및 가정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 없이,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소득별로 지난 정권 시기 국가 및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와 다음 정권 시기 국가의 경제사정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모든 소득 집단이 국가 경제 사정보다 가정의 경제 사정을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과거의 경제사정은 제일 안 좋게 평가한 반면, 미래의 경제사정은 제일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저소득층의 경제평가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V. 끝맺는 말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증가와 투표율의 하락 사이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짚으며, 오늘날의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특히 선거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상과 함께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삶이 피폐해지고, 계층별 격차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계층 균열에 입각하여 투표하지 않는 것인지, 저소득층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자 하였다.

저소득층 유권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 만든 “계급배반 투표(Class Betrayal Voting)”라는 용어는 이러한 고민을 함축하면서, 또한 동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자아내왔다. “왜 저소득층은 이른바 계급배반 투표를 하는가?”

그 결과로, 많은 논문들이 다시 한국 정치학회에서 사라졌던 주제, ‘계층투표’에 관심을 보이며, 계층투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계층별 후보자 선택의 차이가 있다는 데에 합의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수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투표행태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계층투표’에 대한 연구는 더욱 진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계층별로 투표행태에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면 저소득층의 투표행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계층별로 정치적 특성 및 경제적 평가 및 기대감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KSDC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제18대 대선 시기 소득별 투표행태를 살펴보았다. 1200개의 샘플을 저소득층(200만원 미만), 중간소득층(200~400만원), 중간소득층(400~600만원), 고소득층(6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소득집단별 구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 당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빈곤층(중위소득 50%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과 일치하였다.

본 논문은 18대 대선 시기 소득별 투표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의 왜곡된 형태로써의 계층투표의 존재를 밝혀내고, 이것이 증가하는 불평등과 연결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득별로 후보자 선택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둘째, 소득별로 정치적 특성(이념성향, 정당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셋째, 소득별로 지난 정권 및 다음 정권에서의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 첫째, 소득 집단과 후보자 선택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별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저소득층의 경우, 박근혜 후보 선택에 있어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으로 나타났다.

2) 둘째, 소득별로 이념성향, 정당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고, 정당선호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을 지지하였다. 저소득층은 이러한 보수 성향과 새누리당에 대한 높은 선호도의 결과로 박근혜 지지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저소득층의 경우 이념적 근접성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와 더 가까웠다는 점이다.

3) 셋째, 소득별로 지난 정권에서의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 평가, 다음 정권에서의 국가 경제사정 기대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저소득층이 지난 정권에서의 국가 및 가정 경제사정에 대해 가장 안 좋았다고 평가한 반면, 다음 정권의 국가 경제사정에 대해 가장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문은 한국과 미국 내 정치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과 민주주의”를 모티브로 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개선하려는 시도이다.<sup>11)</sup>

11) 사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선거, 의회 등의 메커니즘 내에서의 왜곡된 대표 선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쇠퇴와 같은 문제를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13. “사회계층과 투표 선택.” 박찬욱 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 선거 분석』 나남, 111-137.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제 12권 제3호(통권 25호).
- 김영태. 2006. “중산층의 투표행태: 1992-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산층, 개혁적인가.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제2차 포럼 자료집. 『한국사회학회』 57-75.
- 마인섭. 2003. “한국 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31-69.
- 신광영. 2004. “한국 진보정치의 존재조건.” 『역사비평』 68호(가을호), 41-64.
- 안순철. 가상준. 2006.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노동당 투표자에 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5권 2호, 37-57.
-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 2013.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22집 2호, 1-23.
- 이용마. 2013. “한국 사회 계층균열의 등장과 정당재편성: 2000년대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박사 논문.
- 이용마. 2014.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계층균열 구조의 등장.” 『한국정치학회보』 48(4), 249-270.
- 장상철. 2008. “누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정당지지 결정요인.” 대한민국 건국 50년의 사회학: 또 다른 60년을 향하여.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119-49.
- 장승진. 2013.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 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7집 4호, 51-70.
- 전병유. 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 한국에서 계층별 정당 지지와 정책 태도, 2003~2012.” 『동향과 전망』, 9-51.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한귀영. 2013.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동향과 전망』, 9-40.

## ABSTRACT

### **Unequal Democracy in South Korea** : Analyzing the voting behavior by Incom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Seo, Hwi-Won\*

This paper focuses on how economic inequality is working in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electoral process. Driven by the fact that the increasingly rising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is correlated with the continually dropping voting rate,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hy low-income people have failed to actively engage in voting or to vote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who would favor for (re)distributional policies to raise their income level.

The more economic inequality has risen to the surface of the Korean politics, the more studies on voting behavior have considered income group as a possible variable which could tell the difference of voting behavior. Unexpectedly, this attention on income inequality in the electoral process captured “Class Betrayal Voting Behavior,” which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low income people do not vote for a candidate who support (re)distributional policies(progressive party), rather a candidate who are against them(conservative party).

This paper tries to entangle this paradoxical phenomenon which I think as a short feature of Unequal Democracy, by analyzing the voting behavior by income group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in South Korea. Using the survey data on voter consciousness conducted by KSDC(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this paper analyzes on whether voters by income groups make any difference in choosing a candidate, have certain different political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attitudes on evaluating and prospect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vious and following governments.

The paper reveal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voters do have different voting behaviors by income. It is surprising that low income vot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a conservative candidate. Second, voters by income groups have many differences in their ideology, party preferences. Low income voters are inclined to have high degree of conservative tendency and party preferences on New Frontier Party, which is Conservative Party in South Korea. Lastly, they show differences in evaluating and prospect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vious and the following government. Low

---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come voters seem to be more optimistic than any other groups as they hope that the economic situation w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government.

**Key words:** Unequal Democracy in South Korea, Larry Bartels,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Class Betrayal Voting, Voting Behavior by Income Groups